

# 2008년 남북농업협력의 방향

## 진정한 실용주의 대북정책으로 거듭나기

북한은 봄철이면 어김없이 요청했던 못자리용 비닐, 비료, 쌀 등의 지원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수해와 국제곡물가격 폭등, 중국의 대북 곡물수출 제한 등으로 북한의 올해 식량사정은 1990년대 중반의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했을 때만큼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지원요청을 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10년간 대북정책은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으로 일관성 있게 진행되어 왔다. 북한이 스스로 개혁개방을 할 수 있도록 환경과 조건을 만들자는데 그 목적이 있고 이에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같은 큰 경험사업의 물고름을 뒀으며 대규모 식량차관과 비료지원 등 정부의 대북지원이 진행되었다. 그 당연한 과정으로 이 시기 남북정상간의 만남이 추진되었고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 2007년 10.4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그러나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지난 10년이 부정되면서 남북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정책들로 대체되고 있다. 북은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는 듯 하다.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은 '비핵개방 3000 구상'이다. 북한이 비핵화(핵 폐기)와 개방이라는 대 결단을 내리면 한국은 국제사회와 더불어 경제·교육·재정·인프라·복지 등 5대 분야의 포괄적 패키지 지원을 통해 10년 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불이 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 구상은 '先 비핵화-後 대북지원'의 엄격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취임 전 인수위 시절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북한이 이러한 엄격한 상호주의적 대북정책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에 대한 지나친 부정 때문이다. 또한 북핵문제는 기본적으로 북미관계의 핵심사항이며 이 문제에 관한 한 남한의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출범초기 더욱 강해지고 있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과 김태영 합참의장의 발언, 개성공단 철수사건, 북한의 서해상 미사일 발사 등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경제 7%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요즘 같이 미국의 경기침체와 환율상승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더욱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남북관계가 악화되어 ‘한반도의 위기’가 조성될 경우 많은 타격을 받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또한 최악의 상황에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실용의 잣대로 풀어가겠다”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사의 한 구절이 지혜롭게 쓰이길 바란다.

또한 북한도 ‘통미봉남’이라 우려되는 행동으로 한반도내의 위기감을 고조시키지 말고 ‘우리 민족끼리’라는 구호를 다시금 높이 들어야 할 것이다.

## 민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현황

당국간 관계가 악화되어도 남북관계를 이어주고 있는 것이 민간부문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하 민간교류)이다. 민간교류는 약 13년의 역사를 통해 단순 인도적 지원에서 개발지원으로 이제는 개발협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민간교류는 국민들이 북한을 ‘적에서, 돕고 협력해야하는 동포’로 인식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와 화해 분위기 조성에 많은 역할을 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아직 남북문제에 관해 국민적 합의 수준이 낮다. 민족문제에서조차 정치권은 초당적 관점보다 정략적인 접근이 주되고 아직도 ‘폐주기’ 논쟁 같은 남남간의 갈등이 현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몇 가지 새롭게 부각되는 움직임들을 살펴보면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그 첫 번째는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등 지역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의 진출이다. 지역지자체는 중앙정부와 달라 당국이라고 할 수 없지만 민간이라고 정의하기도 어렵다. 그런데 이런 지자체들의 대북지원과 교류사업에의 참여가 의미 있는 것은 바로 민간도 정부도 아닌 그 정체성에 있다. 당국간 경색국면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고, 민간단체들이 사업비의 한계에 의해 하지 못하는 의미 있는 사업들을 집행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업과 관련한 기반조성사업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두 번째는 많은 지역과 분야의 단체들이 실제적이며 지속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문화 교류행사를 통한 남북의 만남만이 아닌 생업의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리며 만나는 것이 관념이 아닌 현실로서 통일을 생각하고 얘기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민들, 단체회원들과 이런 현장에서의 행사들은 백마디의 말보다 훨씬 호소력 강하게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의 상생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하여 북한도 민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폭과 범위를 좀 더 개방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 기술협력과 지원을 통해 남북 상생의 구체적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의 높은 기술력을 지원, 이전하고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 그 밖의 풍부한 물적자원들과 결합되면서 남북 서로가 윈윈하는 구체적인 사업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개성공단과 경남통일농업협력회의 딸기모종 반입사업이 그 좋은 예이다.

## 새로운 모색 - 2008년 통일농수산 남북농업협력사업

농업분야에서의 대북지원사업은 북한의 식량난 해결과 맞물리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의 하나이다. 가장 먼저 단순지원에서 개발지원, 개발협력으로 발전하였고 이제는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분야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남측 농업계의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사단법인 통일농수산은 전문적으로 농업분야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이다. 2004년부터 협동농장영농협력사업을 금강산지역에서 시작해 2007년 개성지역에도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

협동농장영농협력은 △ '협동농장'이라는 협력단위 △종합개발방식의 공동추진 △시범사업을 통한 성공사례확산 프로세스 △실질적인 협력성과 축적 △중장기 농업협력비전 제시 등의 성과를 확보함으로써 남북 간 농업협력의 모범적인 선행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금강산지역의 협동농장영농협력을 통해 북측은 3,000톤 이상의 식량을 증수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지역의 농업구조 개선 및 협동농장 복합경영체 육성에 필요한 전기를 마련했으며, 금강산관광과 연계하는 관광형 농장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었다.

개성지역에서는 농업협력을 위한 기본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고, 지역적 특수성과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사업영역을 우선 추진함으로써 북측의 협력의지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었다.

2008년 금강산지역의 농업협력은 1단계 협력사업의 성과를 유지하고, 보완사항을 점검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본격적인 3개년 농업협력에 대한 조정기에 해당되는 셈이다. 개성지역은 조만간 '개성공업지구'에 다양한 농산물을 공급해야 할 과제와 기회를 동시에 안고 있으며, 향후 서울과 평양의 양대 도시를 겨냥할 수 있는 전략적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의 농업협력은 △식량증산 사업 비중을 전년보다 자소 축소 조정하는 대신 △영농기반 확충 △지역소득원 개발 △특작부분의 기술개선 등에 관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2008년은 통일농수산에게 민간단체·지자체와의 협동사업이 본격화되는 해이다. 25개 단위와 사업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이 중 많은 단체·지자체는 이미 합의를 작성하고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관련하여 통일농수산은 이제까지 대북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되어 있는 지혜와 기술을 민간협력사업자들에게 잘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 통일농수산에게는 금강산지역과 개성지역에서의 영농협력성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협력프로그램을 보다 구체화 할 또 다른 과제가 있다. 이를 위해 2008년에는 '해외농업공동개발'과 '인삼·양파·김치사업분야의 대규모협력'을 견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추진체계를 개발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남북의 농업협력을 통해 우리민족의 먹는 문제 해결과 통일농업을 통한 새로운 경쟁력회복,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번영·통일에 기여하는 새로운 진전을 간절히 소망한다.

